

안전과 균형을 위한 책무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천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생명을 유지시키는 모든 체계는 어떠한 자극으로 불안정해지면 반드시 안정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체계의 균형이 무너지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재해를 동반하는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자연 현상은 물론이거니와 교역을 통한 수급도 크게 보면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생태계의 자연스런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앓아가는 자연 재해는 고통스럽지만 어찌 보면 감내해야 할 몫이다. 하지만 인재(人災)는 다르다. 생태계의 유지를 위한 활동도 아닐 뿐더러 예측조차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각종 시설물과 교통수단 등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 피해는 막대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이맘때쯤 소중한 청년들을 앓아갔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전 국민들을 슬픔과 분노 속으로 밀어 넣었던 세월호 참사, 그리고 판교 환풍구 사고와 의정부 화재 사건 등은 안전 불감빛은 후진국형 재해들이었다. 국민적 트라우마까지 생기게 한 이러한 후진국형 재해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자 처벌과 사후 조치에만 묻혀 간과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인간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 계획되고 설계된 시설물이 부실하게 건설되고 관리되면 되레 파멸과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고도 성장기에 무수히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건설하였다. 산업화에 필요한 물류와 에너지 시설, 그리고 주거 시설 등을 질보다는 양 중심으로 지어 공급하였다. 이러한 SOC 시설물들은 이제 건설한 지 30년이 넘어서고 있다. 유지관리가 절실한 시점이 온 것이다. 우리보다 도시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들이 SOC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보강을 중시하면서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시점이다.

안전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가치는 바로 균형이다. 균형이 잡힌 국가와 사회가 안전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지역간 SOC 균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SOC는 경향간 경제의 양극화를 완화해줄 뿐만 아니라 교통·주거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된 부분이므로 또 다른 형태의 복지다. SOC 시설이 적소에 건설되고 적기에 유지되어 올해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CERIK